

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향후 반도체 업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9.6. 서울경제는 「162조 미래대응기금… 5년 뒤엔 ‘빈주머니’」 기사에서
 - “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에 대해 약 5년이라고 보고했다.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‘지속 가능한 기금’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.” “정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4~5년 단위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.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가 마무리 되면 재정 저수지가 마르는 셈이다.”
 - “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. 따라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기간이 4~5년 정도라면,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.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사업의 재정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①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.

-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규모, 기금의 지출규모 및 지출증가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.

- 기금의 수입은 이번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장기화 여부, 반도체 업황의 주기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 적립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.
- 다만,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3~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다음 반도체 호황기에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제고, 자체 수입 확충 노력 등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또한, 「전략적 투자 → 잠재성장률 제고 → 세수 기반 확충」이라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.

② 미래대응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.

- 우리 경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산업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해 왔습니다.
- 하지만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이러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“더 벌면 더 쓰고, 덜 벌면 덜 쓰는”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- 그 결과 '23~'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('23년 56.4조원, '24년 30.8조원)이 발생하여 외평기금 활용, 지출 불용, 지방교부세·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.
- 미래대응기금은 과거의 재정운용 방식에서 탈피하여,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.
- '27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입을 모두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모두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,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.

- 호황기 증가한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였다가 불황기 세수 둔화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여력을 보강한다면 재정을 기존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'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162.3조원 중 ❶ 미래 대응투자에 45.4조원, ❷ 신규 국채발행 물량 축소에 12.5조원 사용하고, ❸ 나머지 104.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유망자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
-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(Moody's)도 “추가세수 전액을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국채 축소에 활용한 것은 국가 신용도에 우호적(credit supportive)”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성훈 (044-214-23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